

“Clean ARKO 재도약을 위한”

2023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2023.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요약)

1 기관 상황

□ 2022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평가

- (종합청렴도) 예술위 종합청렴도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한 '4등급' 판정
- (청렴체감도) 외부체감도 결과, 부패경험률 제로화 달성 및 기금지원사업 운영부문 부패인식도는 낮음. 내부체감도 결과, 부패경험률이 발생(2.74%) 하였으며, 부패인식도는 동일유형 대비 모든 항목이 낮은 수준임.
- (청렴노력도) 시책효과성 평가결과 신고자보호제도 및 기관장등 의지 노력 부문 낮음

2 목표 및 중점방향

□ 2023년도 목표 :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기관 경영·행정 등 불공정한 제도 등 정비 및 내부 불공정행위 개선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청렴과제를 발굴하여 전사적으로 이행
-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관장 등 경영진의 선도적 참여

3 중점 추진사항

□ 반부패·청렴 시책 실행력 강화

-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마련 등) '반부패·청렴 추진단' 운영강화로 기관의 청렴시책 추동력을 제고하고, '청렴·윤리경영 전담조직(신설)'을 통한 청렴 시책의 실효적 전개
- (부패취약분야 개선) 기관의 부패위험 연구·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발굴 및 「부패위험 리스크」 기반 주기별 점검체계 구축·운영
- (1청렴 1실천과제) 기관장 등 고위직이 청렴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부서 중심의 1청렴 1실천과제 등 전사적 청렴시책 추진

□ 부패유발 요인 정비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준수 점검 및 자체 신고주간 캠페인 등 추진하여 내부 청렴수준 제고
 - (점검사항) 업무추진비, 여비 등 예산 부당집행, 임직원 갑질행위(부당업무 지시 등), 임직원 외부활동 적정성,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 (이해충돌 방지제도 및 인사 관리제도 점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및 공정채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관리 실태점검
- (제도정비 등 기관 내 제도개선 추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적극 이행과 더불어 기관 사규에 대한 점검을 통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제거

□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간부 승진대상 ‘청렴진단’ 제도 마련) 권익위가 배포한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활용, 부서장 이상 승진대상자 사전 인사 검증
- (임직원 청렴성 진단) 부서장 이상 직무 부패위험성 등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부패위험이 높은 항목 및 직무·직위 관리 강화
- (보조금등 부정수급 점검 및 제도 개선) 공공재정금 부정수급 점검 및 부정수급 근절·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관리 매뉴얼 마련
- (부패·공익 신고시스템 정비) ‘아르코종합신고시스템’ 및 (권익위)청렴포털 등 유사중복 기능 정비하여 접근성 제고하고, 기관의 청렴활동 정보공개 강화
- (반부패·청렴 교육의 실효성 제고)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강화 및 청렴규범 내재화를 위한 직위·직무별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 청렴시책 성과 제고·확산

- (지역·사회로의 청렴문화 확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강화를 통한 조직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 청렴활동으로 시책 공동 추진
- (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문화예술 확산) 현장 중심의 예술인(단체) 대상 시책 공유·확산 및 지역 광역시도 문화재단과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개선

추진계획

“Clean ARKO 재도약을 위한”

2023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2023.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서

I. 추진성과와 시사점	
1. 주요 추진성과	1
2.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1
II. 대내외 여건 및 전략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3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4
III. 2023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5
IV. 2023년 추진계획	
1. 반부패·청렴 시책 실행력 강화	6
2. 부패유발 요인 정비	7
3. 부패방지 제도 운영	9
4. 청렴시책 성과 제고·확산	11
V. 추진일정	13
붙임 1. 전략과제별 세부추진내용	14
2. 반부패·청렴 추진단 조직도	15

I. 추진성과 및 시사점

1 주요 추진성과

□ 2022년 주요 추진성과

- **(제도운영)** 「반부패·청렴추진단」을 통한 「1부서 1청렴과제」를 첫 시행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규정제정 등
 - * △「1부서 1청렴과제」 21건 중 20건 이행완료(이행률 95.2%)를 통해 '공정채용 운영지침 개정',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 '보조금 집행 점검' 등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과제 선정·이행, △예술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22.4.28.)
- **(부패예방)** 청탁금지법 위반·자진 신고기간 첫 시행 및 포상제도 운영,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미이행 과제 적극 이행 및 부패영향평가 이행
 - * △청탁금지법 신고기간(2회운영),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이행률 83.3%), △교육·문화분야 부패영향평가 이행완료(7건),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완료(5건)
- **(내부통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3회), 이해충돌 신고창구 신설
 - * △예산 목적 외 사용·외부강의 준수여부 점검 및 임직원 자가점검 등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실시(3회), △공식 누리집 신고페이지 내 이해충돌 신고창구 신설(22.6.2)
- **(시책확산)** 반부패·청렴 교육주간 운영, 청렴·윤리마일리지 제도 개편, 광주·전남지역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청렴시책 실천 의제 선정·이행
 - * △이해충돌방지법 포함 100% 교육이수, △청렴윤리 마일리지 교육수강 이수적립지표 제한 완화

2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 2022년 종합청렴도 주요 결과

- 2022년 청렴체감도는 82.0점(4등급)으로 외부경험자 부패경험 제로화를 달성 하였으나, 부패인식도는 기금지원사업운영은 특혜제공이, 임직원은 갑질행위 부문이 특히 낮으며 내부체감도 임직원의 부패경험률 발생.
- 2022년 청렴노력도는 83.2점(3등급)으로 청렴시책 기반은 양호하지만 기관 특성을 반영한 과제 발굴이 필요함. 시책효과성 부분은 신고자보호제도 및 기관장 등의 의지 노력 부문이 특히 낮음 상황.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및 시사점

구분	영역	'20년	'21년	'22년	평가결과 분석 및 시사점	
청렴 체감도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8.66	8.63	91.9	○ 91.9점으로 동일유형(95.9점) 대비 4점 낮음 - 기금지원사업운영(89.4점)의 부패인식도가 계약 및 관리(94.4점)보다 5점이나 낮음 ⇒ 기관의 심의제도 불신 여전
		부패 경험	8.41	6.11	0.0	○ 외부경험자의 부패경험률은 0%, 부패경험빈도 0회로 전년대비 개선 ○ 3개년간 발생하였던 외부 업무경험자의 부패경험률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조사 표본이 적은 기관에 해당되어 지속적인 점검 및 노력 필요
	내부 체감도	부패 인식	6.59	7.11	66.0	○ 동일유형(71.4점) 대비 낮은 수준인 66.0점으로 모든 항목이 낮은수준 - 불공정직무수행 : 인사위반(-7.2)>부당차사(-6.8)>부정청탁(-2.9)>특혜제공(-1.5) - 공직자 권한남용 : 예산부당집행(-8.7)>갑질행위(-7.5)>사익추구(-4.3) ○ 기관 내 높은 항목은 사익추구, 낮은 항목은 갑질행위이며, 동일유형 내 높은 항목은 특혜제공, 낮은 항목은 예산 부당집행
		부패 경험	7.64	7.51	-7.6	○ 부패경험률 2.74% 및 부패경험빈도(1인당 0.096회)가 발생함 - 향응등 경험 1.37%(1명) / 편의등 경험 2.74%(2명) · (향응등) 규정 위반, 식사·접대·골프·국내외여행 등 : 1.37% (1명) · (편의등) 규정 위반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부당업무지원 등 : 2.74% (2명) - 부패경험 빈도는 응답자 1인당 0.096회로 전체응답자 경험빈도 합 7회
청렴 노력도	추진체계		85.0		○ 추진체계의 경우 동일유형 대비 2.1점 높은 85.점 - 청렴시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기반 양호 수준	
	추진실적		79.9		○ 추진실적의 경우 동일유형 대비 1.4점 낮은 79.9점 - 기관 특성이 반영된 청렴과제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과제별로 의도된 정책효과 발현 수준 확인을 위한 객관성 높은 자료를 활용 필요	
	시책효과성 평가		64.1		○ 세부항목별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동일유형 대비 7.2점 낮음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부문과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부문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가장 높은 항목은 청렴교육 이행 항목임	

시사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부패 경험률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나, 내·외부 부패인식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기금지원사업운영 부문은 특혜제공이, 내부 임직원은 갑질행위 부문이 특히 낮은 수준으로 불공정한 기관 경영·행정 제도 정비 개선 노력 강화 필요 ○ 청렴시책 기반은 양호하지만, 기관 다각도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청렴과제 발굴을 통하여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며, 신뢰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 및 고위직의 선도적인 참여가 필요
-------------	---

Ⅱ. 대내외 여건 및 전략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외부 환경

-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공직사회의 부정수급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사용 근절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기대
- 시책 추진 역량집중을 통한 정부 2년차 가시적 변화 기대
 - (부패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 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 및 공공·민간 접점의 부패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점검 추진
 - (민원 적극해결을 통한 체감도 제고) 현장 중심 민원과 빈발되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여 국민의 정부 시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 내부 환경

- 새로운 기관장 등 경영진 출범에 따른 시책 변화 요구
 - (반부패·청렴 시책 혁신 기대) 기관장 등 신임 경영진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등 기존 반부패·청렴 시책 혁신 요구
 - (청렴문화 내재화 부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반부패·청렴 시책의 임직원 인식 부족 및 지속적 관심 제고가 필요
- 청렴도 등급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부패인식도
 - (부패경험률 지속 발생)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으나,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패경험빈도는 동일유형 대비 높음
 - (부패인식도 낮음) 외부 업무경험자의 부패인식 항목 중 ‘특혜제공’ 이 매우 낮으며, 특히 기금지원사업운영 부문에서 부패인식도가 낮음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 SWOT 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	강점(S) • 새로운 경영진 청렴부문 혁신 요구 • 전사적 반부패·청렴 협업기반 구축 • 문화예술진흥기구로서 선도역할 기대	약점(W) • 내부 임직원 부패경험률 발생 • 기관 경영행정인사분야 신뢰도 저하 • 조직 내부 자율적 통제제도 미흡
	기회(O)	SO 전략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으로 기관 “신뢰도 제고”	WO 전략 “부패방지 제도운영”을 통한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위협(T)	ST 전략 “민·관·전사 협력 점검”을 통한 “부패위험 사전예방”	WT 전략 “시책 파급효과 확산”을 통한 기관 “청렴조직 구축”
	• 2년차 정부에 가시적 변화 기대 • 정부권익위 국민고충 적극 해소의지 •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기금지원사업 부패인식도 낮음 • 공직사회 부정수급 발생 여전 • 문화예술분야 부정적 인식 여전		

□ 전략방향

2023년 권익위 업무계획	비전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목표	민생고충 최우선 해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과제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지원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제도개선	국민에게 힘이되는 적극적 권익구제



2023년 예술위 추진방향	전략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부패방지 제도운영으로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청렴시책 성과 확산으로 내·외부 청렴인식 제고
	운영 기초	기관장 등의 부패취약분야 청렴과제 선정 및 선도적 이행	기관 경영·행정·인사 등 내부 자율적 통제제도 확립	신고사각지대 해소 및 민·관·전사 협력활동 강화
	중점 사항	○ 기관장 등 경영진 중심 「반부패·청렴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내실화있는 운영 ○ 경영·행정 부문 등에 대한 취약분야 및 부정수급 점검을 통한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 ○ 임직원 맞춤형 교육 및 의무교육이수제 강화를 통한 교육만족도 및 이수율 제고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고시스템 개선·홍보 ○ 민·관·전사 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성과 확산		

Ⅲ. 2023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비 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아르코(ARKO)
-----	------------------------

목 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

중점 · 세부 추진 과제	1. 청렴시책 실행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청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② 기관 부패위험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③ 「1청렴 1실천과제」를 통한 전사적 반부패·청렴활동 전개
	2. 부패유발 요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내부청렴 제고 ② 이해충돌 방지 및 인사관리 제도 점검을 통한 취약 요인 개선 ③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유발 사전 예방
	3. 부패방지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영진 청렴수준 진단 및 청렴진단 인사제도 신설 ② 보조금등 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정비 및 개선 ④ 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4. 청렴시책 성과 제고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청렴문화 확산 ② 기관 반부패·청렴시책 문화예술 협·단체로의 확산 노력

KPI	주요 추진과제	2022년 성과	2023년 목표
	■ 외부체감도 제고	91.9점	95.0점 이상
	■ 내부체감도 제고	58.4점	80.0점 이상
	■ 부서별 「1청렴 1실천과제」 이행	이행률 95.2% (21건 중 20건 이행)	이행률 10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3회 (외부강의등, 예산목적의 사용 등)	4회 이상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이행률 83.3% (24건 중 20건 이행)	이행률 90% 이상
	■ 「반부패·청렴 추진단」 회의 추진	2회 (3월, 7월 각 1회씩 추진)	매월 1회 (총 8회)

추진 기반	내부 실행조직	전담부서	외부 전문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청렴추진단 ■ 반부패청렴실무단 ■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실(반부패·청렴) ■ 정책혁신부(윤리인권경영) ■ 인재성장부(인사·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시민감사관(사전예방) ■ 감사자문위원회(사후관리) ■ 윤리인권소위원회
	내부 평가지표	외부 평가지표	공유·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경영 인지도수(EHPI) ■ 공정심의·평가 설문조사 ■ 자체조사(반부패, 청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청렴도 측정 ■ 경영평가(윤리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청렴추진단 보고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 내부 청렴교육 공유

IV. 2023년 추진계획

1 반부패·청렴 시책 실행력 강화

□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청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 청렴시책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반부패·청렴 경영위원회'로 조직 확대

- 기관장의 반부패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 추진단 조직을 고위직과 실무진이 공동 참여하는 '청렴경영위원회'(약칭)로 확대
- (구성) 기관장 포함, 경영단과 실무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 반부패·청렴 경영단 : 사무처장 및 본부장 고위직(총 7명)
 - 반부패·청렴 실무단 : 감사실, 정책혁신부 등 실무직원(차·과장급) 10명 내외
- (운영방향) 기관장 주도하게 반부패·청렴 과제 논의, 개선, 이행점검 등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반부패·청렴 시책과 개선과제 등 실행 강화
 - 반부패·청렴 경영단 : 반부패·청렴 개선과제 경영시스템(제도) 구축, 이행 관리
 - 반부패·청렴 실무단 : 반부패·청렴 시책 및 개선과제 발굴, 개선 실행

○ 기관장 직접 참여하는 청렴 실무단 운영을 통해 청렴활동 실효성 제고

- (부패·불공정 체크리스트 마련) 그간의 청렴도, 자체조사 등 지적사항 및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한 체크리스트 5월 중으로 마련하고, 기존 부패위험(리스크)를 재정비하는 등 청렴시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 (기관장과 실무단 정기회의 추진) 기관장의 주도하에 청렴실무단과 매월 청렴시책 및 개선과제 이행상황 등 점검회의를 통해 가시적 성과 제고
- 실무단과 기관장간 소통 강화 및 직보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불공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조치하고, 구조적 문제는 시스템(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경영 강화

□ 기관 부패위험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 기관 부패 위험 연구·분석을 통한 조직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부패위험 재분석 및 점검체계 구축) 현행 ‘예술위 부패위험 식별리스크’ 재점검 및 분석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 도출 및 「부패위험 리스크」 기반 주기별 점검체계 구축(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활용)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관리) 반부패청렴 추진단(기관장 주제)에서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검토 후 중점과제(1~2개) 선정하고 이행실적 점검, 평가

□ 「1청렴 1실천과제」를 통한 전사적 반부패·청렴활동 전개

○ (1청렴 1실천과제 추진) 기관장 등 고위직이 청렴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부서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추진

- 기관장 주제 「반부패·청렴추진단」에서 실천과제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 「1청렴 1실천과제」는 경영 및 사업 등 기 식별된 부패위험(리스크) 320개를 기반으로 각 부서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시행
- * 기관 부패위험 연구결과 활용하여 과제발굴(5월) → 부서별 과제선정(6월초) → 부서별 과제 이행 및 점검(6월~8월) → 과제제출·환류(9월)

2 부패유발 요인 정비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내부청렴 및 공직기강 제고

○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통해 내부체감도 제고

- (예산의 부당집행 점검) 물품구매 및 용역 등 소액 지출(300만원 미만) 계약 및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예산의 부당 집행 여부 점검

- (갑질행위 진단 등 점검) 불공정 업무지시, 부당지시 등 조직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하여 갑질행위 발생 위험이 있는 직위, 직무 등에 대한 갑질 진단 (점검) 및 전담부서 지정, 신고시스템 등 제도적 운영 실태 점검
- (임직원 외부활동 전반 점검) 외부강의등 준수 의무 점검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공직자의 외부활동 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부활동 전반 점검

○ 부패취약시기 자체 신고주간 캠페인 추진 (매년 실시/7월 휴가철, 9월 명절)

- (청탁금지법 위반 점검) 기관 부패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선제적 예방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추진
- (신고 캠페인 추진) 내·외부 대상 신고 캠페인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중점 점검

□ 이해충돌 방지 및 인사관리 제도 점검을 통한 부패 취약요인 개선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감사실)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점검) 이해충돌 4대 중점 업무인 ①지원심의제도, ②용역·평가, ③인사채용, ④수의계약 운영실태 점검 및 사규 정비 추진
- (이해충돌 방지 시책 추진)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 청렴서약, 이해충돌 사전체크리스트 개발 및 자가진단, 모의훈련 등 이해충돌 방지 활동 추진

○ 인사 관리제도 실태점검을 통한 제도 개선

- (공정채용 운영제도 점검) 기관 사규 내 ‘채용분야’ 규정화 여부 및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명시 여부 검토 후 규정 개정 등 정비 추진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점검) 기관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명시 여부 등 점검을 통한 규정 개정 등 운영제도 정비

□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유발 사전 예방

○ 권익위 권고과제 적극 이행을 통한 제도개선

- (권고과제 이행 및 주기적 점검) 신규 과제 포함 재점검이 필요한 과제 및 전년도 미이행 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적극 이행

* 2013년부터 2023년 권익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사규 수시 정비를 통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제거

- (규정체계 점검·개선) 기관 부패유발 요인 중 하나인 상위규정 및 규정 간 불일치, 자의적 유권해석 여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체계 등 검토·개선

* 상위법령과 사규 간 연관성, 사규 체계성 검토 및 유사 사규 간 통합 등

3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경영진 청렴수준 진단 및 간부 승진대상 청렴인사 제도 신설

○ (간부 대상 「승진자 청렴진단」 제도 마련) 권익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활용, 부서장 이상 승진대상자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

* 인사부서와 진단모형, 방식 등 논의 후 제도 마련 및 시범운영 추진

○ (임직원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및 제도화) '23년 부서장 이상 간부 대상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솔선수범 유도를 위한 '부패위험성 등 자가진단' 실시하여 부패위험이 높은 항목 및 직무·직위 관리 강화

* 정책혁신부와 진단모델 등 논의 후 '청렴윤리마일리지제도'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 보조금등 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및 신고시스템 연중 운영 (감사실)

- (부정수급 점검) 기관 공공재정사업 90% 이상, 보조금으로 부정수급 빈발

사업 또는 보조사업자* 등을 점검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등 조치

* 점검대상 : 과거 5년간 부정수급 이력 및 e나라시스템 부정징후 단체 등

- (부정수급 신고주간 및 상시 신고시스템 운영) 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근절 및 환수 조치

○ 부정수급 관리제도 점검 및 관리 매뉴얼 마련 (감사실, 지원총괄부)

- (관리제도 점검)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제재조치 등 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 강화
- (매뉴얼 마련 및 관리체계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조사 등 업무 처리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 정비 등 개선 추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정비 및 개선

○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신고시스템 정비 및 기능 개선

- (자체 신고시스템 정비·개선) 현재 운영 중인 '아르코종합신고시스템'과 권익위 청렴포털, 레드휘슬 등 유사중복 기능 정비 등을 통해 신고창구 접근성 제고

* 권익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과 기관 신고시스템 간 연계 강화 지속

- (정보공개 강화) 기관 홈페이지 및 청렴포털을 통한 청렴활동(우수시책, 캠페인,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과 신고·상담사례 등 정보공개 강화

*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 반부패·청렴 업무 및 제도 소개를 위한 페이지 리뉴얼

□ 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강화

- (전 임직원 대상 교육 실효성 제고) 내부교육시스템, 전문강사 강의 등 대면교육을 통한 청렴교육 내실화 및 홈페이지 교육현황 공개 등 운영 강화

* '23년 교육프로그램운영(안)

- (필수)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 (맞춤형) 부패방지 교육(청렴UP), 신규자·승진자 대상 교육, 본부장 이상 갑질근절 교육, 부패·공익신고 교육 등

※ '22년 종합청렴도 결과 부정적 인식 높은 부패·공익신고 관련 교육 실시 및 기관장 주도 적극 참여하는 조직 내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집합교육 실시

-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도 운영 강화) 청렴교육 이수율 부진 부서에 패널티 (부서평가 감점) 및 우수부서 연말 포상(인센티브) 등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도 운영 강화

○ 청렴규범 내재화를 위한 직위·직무별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 (부서장 이상 간부 청렴교육 강화) 조직 내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경영진의 청렴규범 내재화를 위한 고위직 포함 경영진 대상 갑질근절 교육* 강화

* 갑질근절 교육(안) : 행동강령 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부당행위의 금지, 부당요구 금지 등

- (부패취약 직무·직위 대상 '청렴 업(UP)' 교육) 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및 직무분석을 토대로 지원심의업무, 계약업무, 인사채용 등 직무청렴 강화 교육 실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직무특성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1주년을 맞아 교육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직무특성 교육을 통한 법제도의 이해도 제고

4 청렴시책 성과 제고·확산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청렴문화 확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강화를 통한 조직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수준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강화) 기관의 경영·행정 및 주요사업 등에서의 발생 가능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과제 발굴 및 개선 등 회의체 운영 강화

- (교류협력 및 진단) 타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교류·협력 추진 및 청렴시민감사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기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통제에 기여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결과 환류

*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설문조사 실시 결과 ‘예술위가 행하는 경영 및 사업 등 반부패·청렴안건 확대가 필요’ 하다는 의견 제시

○ 지역 기반 청렴활동으로 시책 공동 추진

- (청렴사회협의회 적극 참여) 광주·전남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청렴활동 공동 추진
-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참여) 광주·전남 「빛가람청렴문화제」 개최 및 종합청렴도 관련 시책 공유, 청렴실천 이행과제 선정 등 지역기반 청렴활동 추진

□ 기관 반부패·청렴시책 문화예술 협·단체로의 확산 노력

○ 현장중심 예술인(단체) 대상 시책 공유·확산을 통한 개선

- 기관 내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된 현장중심의 예술인(단체)가 제안한 의견들을 취합·분석하여 예술위 업무 경험 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적인 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선

○ 지역 광역시도 문화재단과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개선 (지역총괄부/한지협)

- 중앙과 지역의 공공재원 등 지원금 중복유사 사업 점검, 공공재원 부정 수급 단체 정보 공유, 보조금 집행관련 공통기준 마련 등을 통한 시책 추진

V. 추진일정(안)

전략과제	세부과제별 목표	추진일정	세부일정(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요일정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기본계획 근거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제출	· 5월 중						
	○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제출	· 6월 중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제출	· 7월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 제출	· 8~9월 중						
	○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 제출	· 10월 초						
	○ 기관장 등 노력과 리더십 실적 제출							

※ ' 23년도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23년 8-11월 예정) /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23년 12월 예정)

전략과제	세부과제별 목표	추진일정	세부일정(안)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청렴시책 실행력 강화	○ 반부패·청렴경영위원회 조직 개편	· 5월							
	○ 반부패·청렴경영위원회 운영(연중)	· 5~12월							
	○ 기관 부패위험 연구분석	· 5월							
	○ 부서별 「1청렴1실천과제」 이행	· 5~9월							
2. 부패유발 요인정비	○ 예산부당집행 점검	· 5월							
	○ 갑질행위 관련 진단·점검	· 6월							
	○ 청탁금지법 신고주간 운영	· 6월, 8월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 점검	· 5~8월							
	○ 인사 채용제도 실태점검	· 4~6월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 상시							
	○ 기관 사규 정비	· 상시							
3.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간부 대상 「승진자 청렴진단」 제도	· 7~8월							
	○ 임직원 「부패위험성 등 자가진단」	· 6~7월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 6월							
	○ 신고시스템 연중 운영	· 상시							
	○ 부정수급 관리제도 점검	· 7월							
	○ 신고시스템 정비 및 기능 개선	· 6~7월							
	○ 임직원 필수청렴교육	· 상시							
	○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 5~8월							
4. 청렴시책 성과제고 및 확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상시							
	○ 빚가람청렴문화제	· 9월							
	○ 현장 예술인 시책 공유	· 4월							
	○ 지역문화재단 협력	· 6~8월							

붙임1

전략과제별 세부추진내용

전략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별 목표	추진일정(안)
1. 청렴시책 실행력 강화	① 기관장 주도 반부패청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 반부패·청렴 경영위원회 조직 개편 ○ 반부패·청렴 경영위원회 운영	· 5월 · 5~12월
	② 기관 부패위험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 기관 부패위험 연구분석 추진	· 5월
	③ 부서별 「1청렴1실천과제」 이행으로 전사적 청렴활동 전개	○ 부서별 실천과제 선정 및 이행(100%)	· 5~9월
2. 부패유발 요인정비	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내부청렴 및 공직기강 제고	○ 예산부당집행 점검 ○ 갑질행위 관련 진단 ○ 청탁금지법 신고주간 캠페인	· 5월 · 6월 · 6월, 8월(2회) *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동일
	② 이해충돌 방지 및 인사관리 제도 점검을 통한 부패 취약요인 개선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 인사 채용제도 실태점검	· 5~8월 · 4~6월
	③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유발 사전 예방	○ 권익위 권고과제 적극 이행 ○ 사규 정비를 통한 부패유발 요인 제거	· 상시 · 상시
3. 부패방지 제도 운영	① 경영진 청렴수준 진단 및 청렴진단 인사제도 신설	○ 경영진 승진자 대상 청렴진단 제도 마련 ○ 경영진 대상 「부패위험성 등 자가진단」	· 7~8월 · 6~7월
	② 보조금등 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 내·외부 신고시스템 연중 운영 ○ 부정수급 관리제도 점검 및 매뉴얼 마련	· 6월 · 상시 · 7월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정비 및 개선	○ 내·외부 신고시스템 정비 및 기능 개선	· 6~7월
	④ 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 전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강화 ○ 직위·직무별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 상시 · 5~8월
4. 청렴시책 성과제고 및 확산	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청렴문화 확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강화 ○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등 시책 공동 추진	· 상시 · 9월 * 빛가람청렴문화제 예정
	② 기관 반부패청렴 시책 문화예술 협단체로의 확산 노력	○ 현장중심 예술인(단체) 대상 시책 공유·확산 ○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개선	· 4월 · 6~8월

붙임2

반부패·청렴 경영 위원회 구성안

□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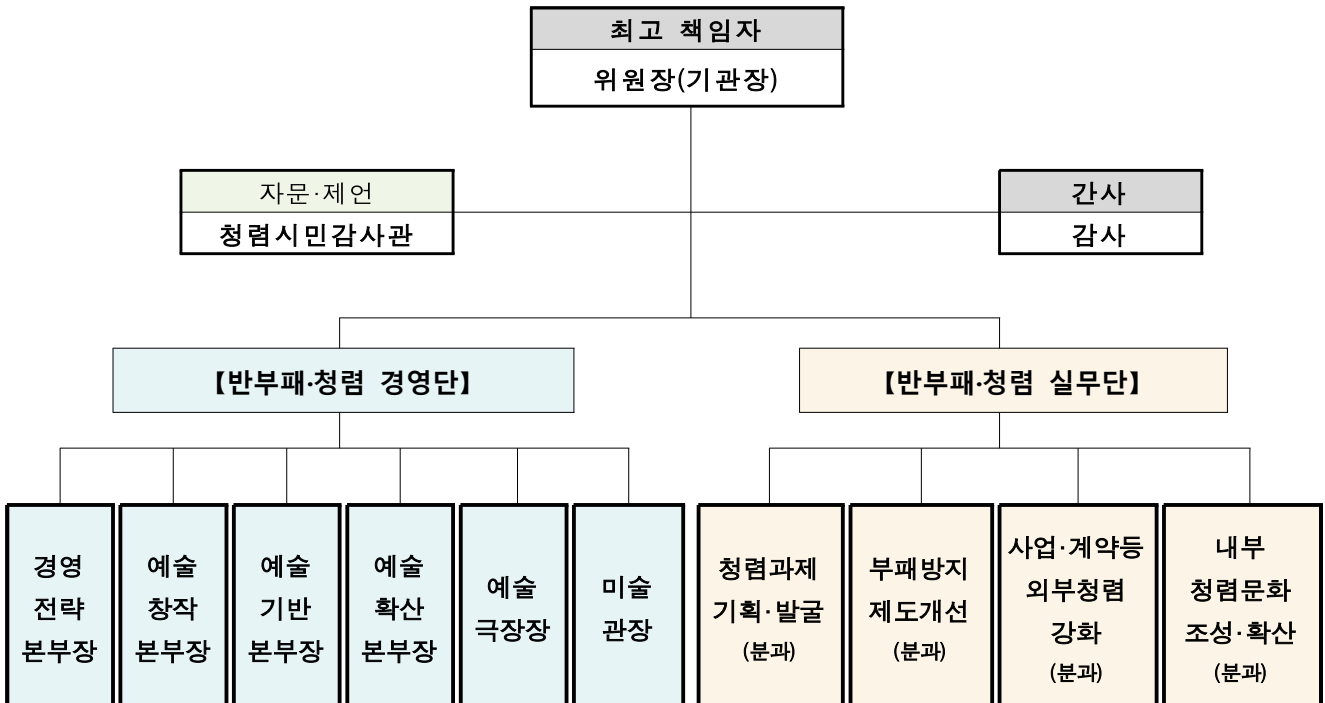
- 구성 : 기관장 포함 총 18명(위원장 1명, 사무처장 포함 경영단 7명, 실무단 10명)
- 반부패·청렴 경영단 : 사무처장 및 본부장 고위직 구성(총 7명)
- 반부패·청렴 실무단 : 기관장 포함 실무직원 10명 내외(차·과장급 2~3명 구성)
- * 감사실, 정책혁신부, 인재성장부, 지원총괄부 등 실무진 협의체 구성

□ 운영방향

- 기관장 직접 주도하는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 기관장의 직접 관리를 통해 반부패·청렴 시책과 개선과제의 실행력 강화
- * ('23년) 종합청렴도 등 당면과제 도출·개선 → ('24년~) 선도적 청렴시책 기획·실행

□ 기능·역할

- 반부패·청렴 경영단 : 반부패·청렴 개선과제의 경영시스템(제도화) 구축·이행관리
- 반부패·청렴 실무단 : 기관장과 실무진 반부패·청렴 과제 발굴·개선 실행



- 청렴시책 및 실무단 개선과제 경영시스템(제도화) 구축·실행
 - 과제별 본부단위로 실행 및 결과 보고·공유
- 주요 부패위험(리스크) 개선과제 실행 및 점검
 - 부서별 1청렴 1실천과제 추진 이행 관리
- 반부패 청렴시책 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환류

- 조직의 반부패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안 도출
- 부패취약 제도 개선 및 부패유발 요인 정비
-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확산
- 갑질근절 등 부패·청렴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점검